



Contents

1 정상의 만남, 화해협력의 장을 열었습니다.

- 분단 반세기를 이어주는 평화와 협력의 만남이었습니다.
- 남북의 약속을 공동선언에 담았습니다.

2 남북의 약속, 이만큼 실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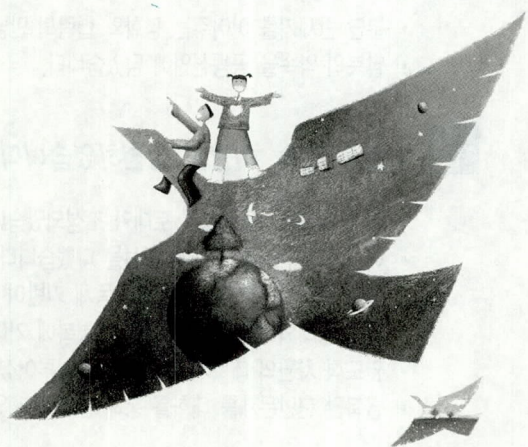
- 전쟁방지와 화해협력의 토대가 조성되었습니다.
-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경제협력 활성화로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인적 왕래의 증가로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 남북간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가고 있습니다.

3 남북관계 개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강산을 남북화합과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합니다.
-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를 제도화합니다.
- 철도·도로 연결로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거듭납니다.
- 개성공단 건설 추진으로 경제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으로 평화공존을 이룹니다.

4 한반도의 미래, 국민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 더불어 함께 하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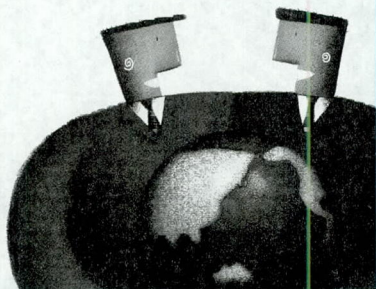


1.

정상의 만남,

화해협력의 장을 열었습니다.

분단 반세기를 이어주는 평화와 협력의 만남이었습니다.



남과북은 2000년 6월 15일,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남북 최고당국자 사이의 첫 만남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 전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이 지난날의 대결과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데 공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분단의 고통 해소 등 소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째,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와 전쟁 우려 감소로 인해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시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분단 반세기를 이어주는 평화와 협력의 만남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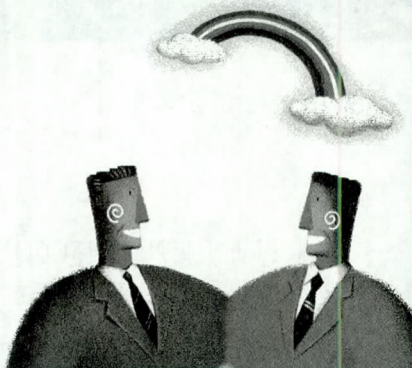
둘째, 반세기 동안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네 차례에 걸쳐 상봉을 하게되는 등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철도와 도로의 연결, 개성 공단의 건설 추진에 남북이 합의하였고, 2000년에는 남북 교역액이 4억2천5백만불로 사상최고를 기록하는 등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남북교류 증대와 함께 우리사회내 북한에 대한 이해가 제고 되었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습니다.

다섯째, 미·일 등 우방국과의 공조체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남북의 약속을 공동선언에 담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만이 분단의 심화를 막고 공동번영과 평화공존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공감하고 5개항으로 된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 남북공동선언 주요내용

1.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추진
2.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3.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고, 비전향 장기수 등 인도적 문제 조속 해결
4.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5. 상기 합의사항의 조속한 실천을 위해 빠른 시일내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적절한 시기 서울 방문



제1항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주는 배타적 자주가 아닌 「열린 자주」로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제2항은 남과 북이 서로의 통일방안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 보다는 공통성을 기초로 하여 통일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과 북이 급격한 국가적 통합이 아니라, 상호체제의 인정과 공존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통일에 접근해 간다는 것입니다.

제3항은 지난 반세기동안 가족들과 헤어진 채 생사조차 모르는 일천만 이산가족들의 고통 해소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양 정상의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제4항은 남북 경제협력과 다방면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하면서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이 북쪽의 노동력과 결합되는 남북 경제 협력은 남북 양쪽 모두에 이익을 주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이며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5항은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들을 실천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년여 동안 여섯 차례의 남북 장관급회담 외에도 남북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남북 당국간 회담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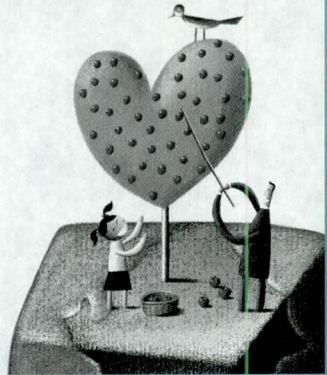


2.

남북의 약속,

이만큼 실천하였습니다.

전쟁방지와 화해협력의 토대가 구성되었습니다.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 우리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제1원칙이 무력도발 불용이라는 점과 1999년 연평해전에서 승리한 「평화를 지키겠다(peace keeping)」는 우리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안보노력」과 함께, 북한주민의 대남 적대감을 해소하여 안보의 근원적 위협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 즉 「평화를 만드는(peace making)」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을 위해 북한의 최전방 해군기지인 장전항이 개방되고, 군사분계선을 가로질러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정상회담 이후 휴전선 일대에서 대남 비방 방송이 중지되는 등 과거에 비해 남북간 긴장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었으며, 2000년 9월에는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제거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2년 4월에는 우리측 특사의 방북을 통해 “전쟁은 공멸”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은 남북관계 복원과 함께 미국, 일본과 대화를 재개하고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루어 낸 화해와 협력의 기반이 보다 굳건해 지도록 각종 남북대화를 통해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산가족의 고통해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의 실천인 동시에 남북간 화해협력의 상징적 징표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와중에서 남북으로 헤어진 가족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서로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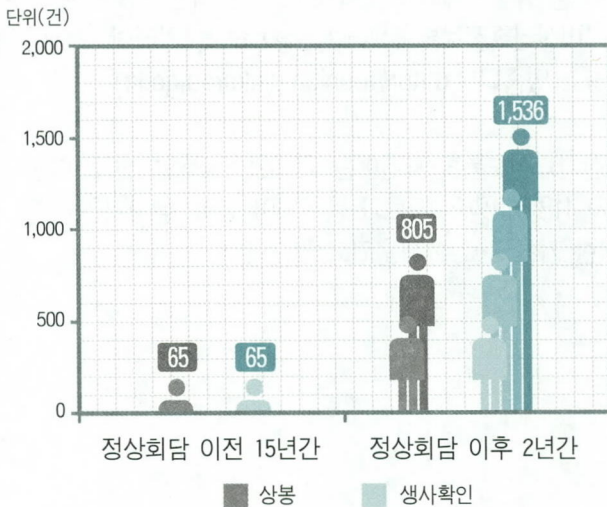
남북정상회담 이후 네 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으로 4,500여명의 가족들이 상봉하였으며, 방문단교환 및 두 차례의 생사·주소 확인을 통해 10,902명이 생사 및 주소를 확인하였고 662명이 편지를 교환하였습니다.



정부차원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은 1985년에 단 한차례(상봉 65건, 생사확인 65건)성사된 후 약 15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2년 동안 네 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을 통해 상봉 805건, 생사확인 1,536건이 성사되어, 정상회담전 15년간의 교류와 비교할 때 상봉은 12배, 생사확인은 24배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정상회담 전후 정부차원 이산가족 교류현황





민간차원의 경우는 1990년 상봉 6건, 생사확인 35건의 소규모로 시작되었으나, 남북정상회담 개최해인 2000년에는 상봉 152건, 생사확인 447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민간차원의 교류를 추진하는 이산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8년 3월부터 이산가족 교류 경비를 지원(생사확인의 경우 80만원, 상봉의 경우 180만원, 교류지속의 경우 40만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산가족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산가족 자료를 취합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reunion.unikorea.go.kr>)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는 2002년 4월말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118,014명의 자료가 등록되어 있어, 생사확인, 상봉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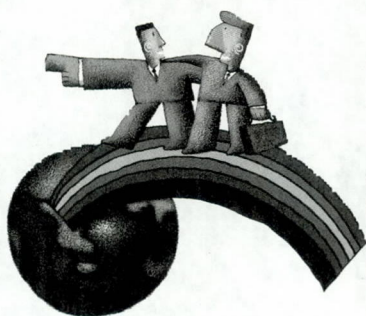
이산가족의 고통해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연령별 등록현황

구분	80세 이상	79~70	69~60	59세 이하	계
인원수(명)	19,166	44,420	27,389	12,448	103,423
신청비율(%)	18.5	43.0	26.5	12.0	100

※ 전체 신청인 118,014명 중 14,591명 사망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이산가족 찾기서비스(Internal Matching)」와 대한적십자사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 활성화로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과 결합시켜 상호 호혜적인 경제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민족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남북간의 긴장과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경협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0년 6월 양 정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여섯 차례의 장관급 회담과 두 차례의 남북경협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경협 4대 합의서 타결, 경의선 철도 연결 합의,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추진 등 남북간 경제협력 기반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문산 - 개성간 도로 개설

남북 경제 기반시설의 연결 필요성에 대한 양 정상의 공동인식에 기초하여 제1, 2차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남북간 도로 연결은 물류비용 감소를 통해 남북교류 자체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민족의 대동맥 연결이라는 역사적 의의도 있습니다.

경의선이 중국 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등을 통해 유럽까지 연결되면 한반도는 동북아 물류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 21세기 세계속의 한반도시대를 열어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의 공사추진을 위해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공사인원, 물자의 출입 및 안전보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군사실무회담에서 「군사보장합의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보장합의서의 서명·발효가 지연됨에 따라 우선 비무장지대 이남 우리측 구간만이라도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2000년 9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착공하여 2001년 12월말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 9월부터 경의선 일부구간인 문산역에서 임진강역까지 열차를 개통하였고, 2002년 4월부터는 도라산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

임진강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공유하천으로 집중호우시 남북 모두가 임진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제1차 남북경협추진위 및 실무협의회에서는 조사단 구성 및 대상 방법 등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또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임진강지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 개성공단 건설

개성 공단은 2000년 8월 현대와 북측(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 합의를 체결하였고, 동년 11월에 현대와 토지공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측은 2000년 12월 「국제자유경제지대기본법(안)」을 북측에 전달하고 개성공단 건설 방향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2001년 9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단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02년 4월에는 우리측의 특사 방북을 통해 동 사업추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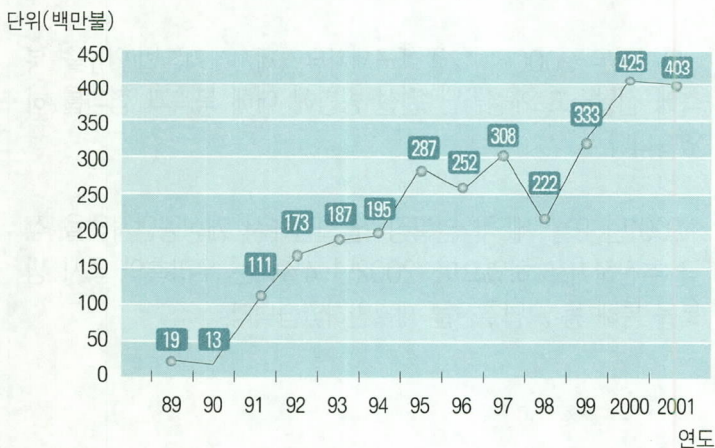
⇒ 남북교역 증대

남북교역은 1989년 약 1,870만불 규모로 시작되어 1991년 1억불, 1995년 2억불, 1997년에 3억불 규모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경제 침체로 1998년에 2억불대로 떨어졌으나, 1999년에 다시 3억불대로 규모를 회복하였고, 2000년에는 4억 2,500만불로 남북교역 사상 가장 높은 교역량을 기록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으나 4억달러선을 유지하였습니다.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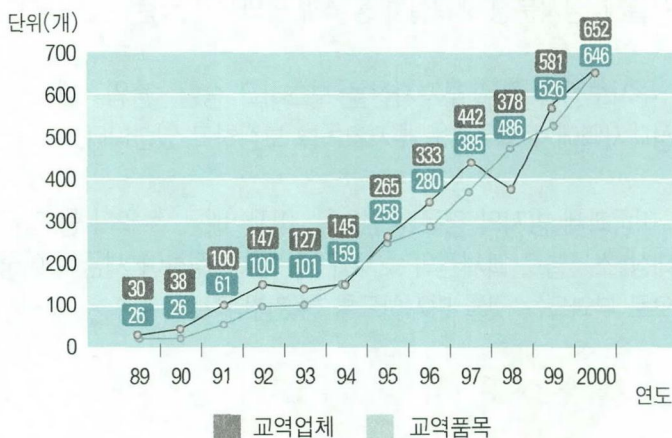




남북이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면 물류비가 절감되어 남북간 직교역이 활기를 띠게 되고,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서도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남북교역에 참여한 교역업체수와 교역품목도 증가하여, 교역업체의 경우 1989년에 30개 업체에서 2000년 652개 업체로, 교역품목의 경우 1989년 26개 품목에서 2000년 646개 품목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교역업체와 교역품목 변화추이





경제협력 활성화로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남북경협 제도화 추진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북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어 장관급회담 및 경협실무 접촉을 통해 남북 경협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남북간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절차 등 4개 합의서가 타결되었습니다.

투자보장의 경우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송금·출입·체류 등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의 경우 사업소득, 이자, 배당, 로열티 등 과세 대상 소득별로 과세권의 소재와 범위를 규정하여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제협력 활성화로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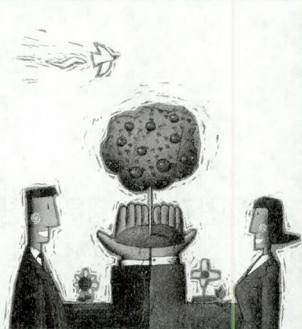
청산결제의 경우 청산결제 대상품목·한도 및 신용한도 설정, 청산결제 은행 지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청산결제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인 일반결제방식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상사분쟁 해결절차의 경우 공동분쟁해결기구인 「남북상사중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4개 경협합의서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통행·통신, 원산지 증명, 산업표준화 협정 등 제도적 장치의 확충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인적 왕래의 증가로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 남북한 왕래규모의 증가

남북경협 및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네 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방문과 대북지원 등으로 남북간 왕래 인원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정상회담 개최 후 2년 동안에 방북한 인원은 17,145명으로, 이는 1989년 이후 12년 동안 북한을 방문한 인원 총 13,103명의 131%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2002년 4월말까지 금강산을 방문한 국민도 44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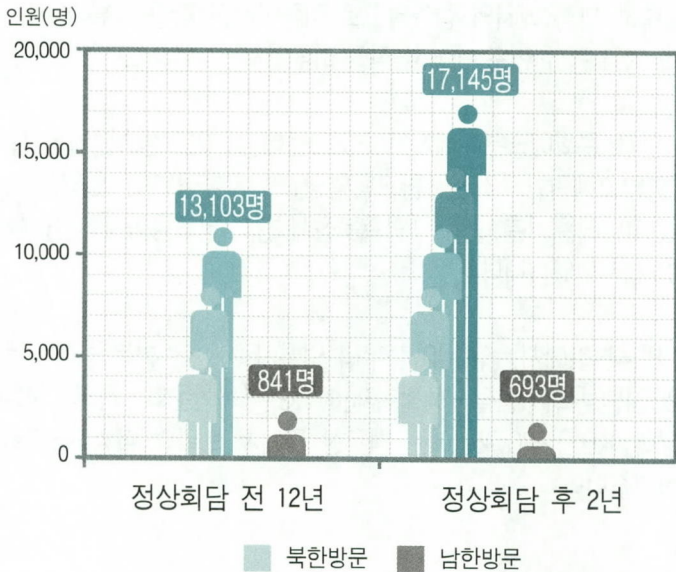
또한 정상회담 개최 후 2년 동안에 남한을 방문한 인원은 693명으로, 이는 1989년 이후 12년 동안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 총 841명의 82%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인적 왕래의 증가로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남한방문이 전혀 없다가 정상 회담이 개최된 2000년 한해동안에만 706명이나 남한을 방문 하였습니다.

정상회담 전후 북한·남한 방문인원 현황





⇒ 다양한 사회문화교류 실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류가 문화·학술·언론·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대규모 행사들이 남북을 오가며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제3국에서의 접촉위주로 이루어지던 각종 교류가 서울과 평양 등 한반도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에서는 2000년에 「평양학생소년예술단」, 「평양교예단」,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이 있었으며, 2001년에는 「춘향전」, 「민족옷전시회」, 「남북공동사진전」 등이 성사되었습니다.

언론분야에서는 2000년 우리 언론사 사장단 방북을 계기로 2001년 「북한 풍물·생활취재」(MBC), 「북한문화·자연·생활 분야」(KBS), 2002년에는 백두산 등에서 드라마 촬영(KBS)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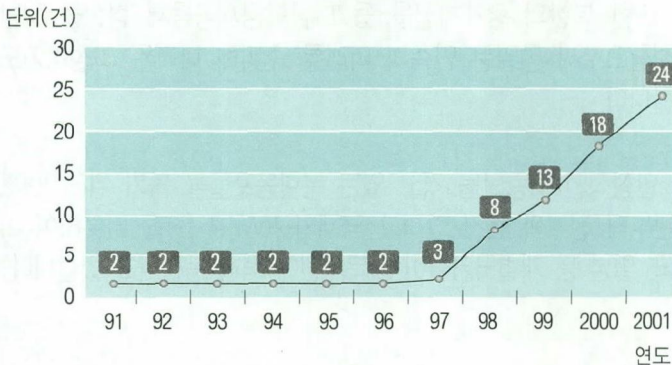
인적 왕래의 증가로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체육분야에서도 2000년 「통일탁구대회」, 2001년 「금강산국제 자동차경주대회」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종교분야에서는 2000년 「부활절 연합예배」,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 2001년 「남북종교인 평화모임」, 2002년 「조국평화통일기원 금강산 기도회」 등 다양한 종교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남북간 사회문화 협력사업은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시작으로 2001년까지 총 24건에 대한 승인이 있었으며,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추이(누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동포를 돕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평화유지 노력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회생을 돕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함으로써 통일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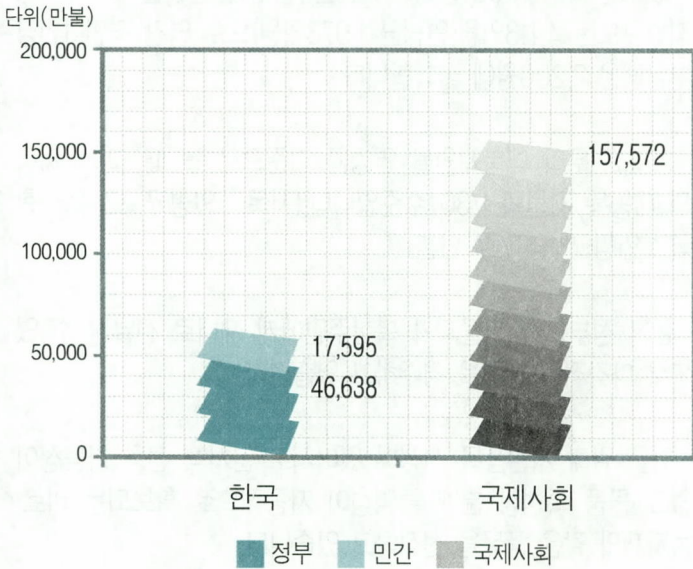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돕기 위해 1995년부터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기구(WFP 등)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개별국가들이 대북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1995년부터 2002년 4월말까지 정부차원의 지원액은 4억 6,638만불이며, 민간차원의 지원액은 1억 7,595만불로, 우리 지원액 총액은 6억 4,233만불로 국제사회의 총 지원액 15억 7,572만불과 비교해 볼 때 29%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및 국제사회 대북지원 비교(1995년~2002년 4월)





또한 지난 4년간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을 살펴보면 한국이 1억9천만불, 미국이 4억8천만불, 일본은 2억불(일본은 국내가격 적용시 약 10배 정도 고가)을 지원하여 우리정부의 대북지원 규모는 미국이나 일본 보다도 액수가 적습니다.

1998년 이후 2001년까지 4년간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총 지원규모는 4,113억원(연평균 1,073억원)으로 연간 국민 1인당 부담액은 2,200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북지원을 연평균 기준으로 볼 때, 과거 서독의 대동독 지원의 1/30 수준입니다.(서독 : 연평균 32억불, 한국 : 연평균 1억 774 만불)

한편 정부는 지원물자가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품목 선정에 있어서도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고 물품 특성상 분배 투명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비료, 농자재와 같은 품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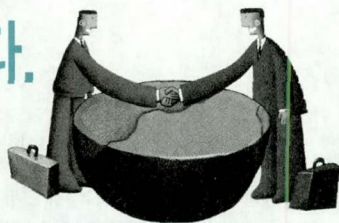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시에는 「지정기탁제」로 구체적인 분배 결과를 통보받고 있으며, 매 지원시마다 대북지원 관계자들이 방북하여 분배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품목

농업분야	종자개량, 축산, 채소재배, 농자재 지원 등
보건의료분야	결핵퇴치, 병원현대화, 의약품 지원 등
환경분야	삼림복구, 삼림공동방제 등



남북간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가고 있습니다.



⇒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중심협의체인 남북장관급회담이 여섯차례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 정상간 합의를 실천하는 중심적 기구로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 화해·협력 관계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을 오가며 여섯 차례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 국방장관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분야별로 다양한 회담을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경의선 및 금강산 육로연결,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6.15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을 주도했습니다.



⇒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방지 논의를 위한 남북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2000년 9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따른 군사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전쟁위험 제거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군사실무회담이 판문점에서 다섯 차례 개최되어 비무장지대내 남북관리구역 설정문제와 남북간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에 따르는 군사적 보장문제를 협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리구역의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타결되었습니다.

⇒ 다양한 분야의 남북간 경제 협력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01년에 분야별 회담인 남북전력실무회의,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분야회담을 통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세 차례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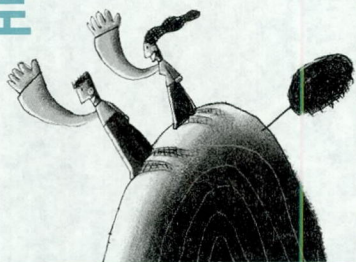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시범적으로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을 실시하는 문제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4회), 생사·주소 확인(2회) 및 서신교환(1회)이 이루어졌습니다.

3.

남북관계개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을 남북화합과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합니다.



1998년 11월 첫 출항으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2년 4월말 현재 44만여명이 금강산을 다녀오는 등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초부터 사업자인 현대측의 자금난, 관광객 수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6월 현대는 북측과 관광대가 지급방식을 매월 1,200만불에서 관광객 수에 따른 지급으로 변경하고 금강산 지역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실시 등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2001년 10월에는 육로관광 실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금강산 당국간 회담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실시 등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이 더욱 악화



되면서 금년 들어 금강산 관광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측 군사지역인 해금강과 장전항의 개방을 유도하고 서해교전 등의 위기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등 남북간 평화유지에 기여해 온 측면을 감안하여 남북협력기금을 대부하는 등의 지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관광경비 부담 때문에 금강산 관광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학생, 교사, 이산가족, 장애인, 참전군인 등에게 경비를 보조하여 관광기회를 넓혀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분단의 고통을 덜어주는 남북화합의 장, 현장체험을 통한 통일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이 긴급하다고 보고 2001년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이러한 입장을 북측에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북측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를 제도화합니다.



4,500여명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하고 서신교환 및 생사확인
을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교류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
겠습니다.

특히, 고령 이산가족들이 재북 가족들의 안부라도 알 수 있
도록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 확대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여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하겠으며 제3국에서 민간차원의 이
산가족교류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철도·도로 연결로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거듭납니다.



제1,2차 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이 경의선 연결에 합의한 후 남측구간은 공사가 완공되어 열차를 운행(문산~도라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비무장지대 이북에 대해서는 지뢰제거와 철로·자재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안에 경의선 연결이 실현되도록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2002년 4월 특사 방북시 남북이 새로 합의한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통해 한반도의 동서 양 물류축을 형성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동해 북부의 단절된 구간은 강릉에서 온정리간 145km로 장기간 공사 및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건설 추진으로 경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2시간 이내 거리로서 접근성이 우수하여 물류비가 절감됨은 물론, 우리측의 기술과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됨으로써 생산제품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00년 8월 현대와 북측(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 합의를 체결하였고, 2001년 9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단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성공단을 개발함에 있어 정부는 2002년중 1단계 공사로 100만평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1단계 공단 개발시 150여 업체가 입주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현대 아산이 1998년 2월부터 2001년 2월 사이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520여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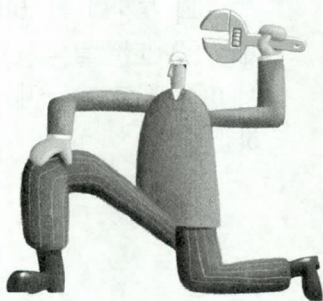


개성공단 건설 추진으로 경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2, 3단계는 국내 공공사업기관, 국내·외 기업, 외국투자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국제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성공단 실무협의회」를 가동하여 통행·통신·통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체계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으로 평화공존을 이룹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화해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2000년 남북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군사적 분야에서 보장하고,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남북간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재개시켜 군사적 신뢰를 도모하고 「남북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경협을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로 활용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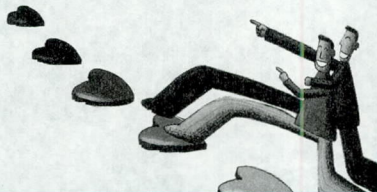
그러나 북한의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미국, 일본 등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통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한반도의 미래,

국민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지금까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안정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남북간 협력관계가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고 끊어진 남과 북의 길도 새로 잇기로 약속하는 등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개선은 무엇보다도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폭 넓은 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뜻과 의지가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추동력이며,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어 슬기롭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때 북한과 주변국들도 이를 존중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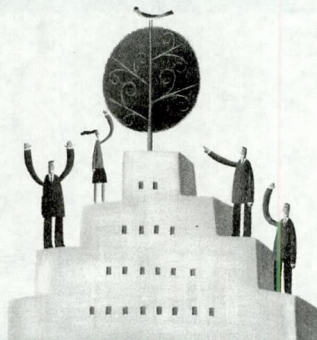
남북관계 개선은 또한 상대방인 북한을 우리민족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남북이 서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주변국의 입장을 균형되게 고려하며, 민족의 이익과 주변국의 이해가 합치되는 영역을 넓혀가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 국민의 뜻과 의지, 북한의 호응,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나아갈 때 대북정책은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와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남과 북은 이제 과거의 반목과 불신을 씻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향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 정착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제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큰 물결 위에서 다소 부침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마지막 「냉전의 섬」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남북 공동번영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민족공동체입니다.

남북이 민족공동체라는 인식하에 대화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머지 않아 우리는 21세기를 선도하는 번영된 국가로 거듭 나게 될 것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로 민족의 대동맥을 잇고, 나아가 중국·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함으로써 우리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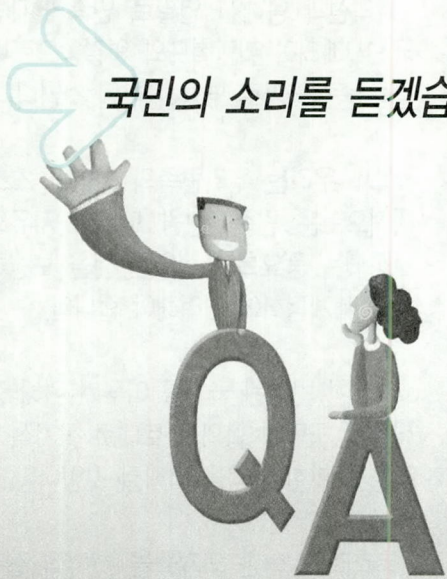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우리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주도하고 개척하여, 내적으로는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풍요롭고 번영된 삶을 보장하고, 외적으로는 지역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영된 국가를 이루기 위해 정부는 화해협력의 큰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장기적 구도하에 차분히 평화와 통일을 향한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북측과 합의한 과제들을 하나씩 실천함으로써 남북은 평화와 공존을 이루게 되며,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함께 잘사는 통일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이런점이 궁금하셨다구요?

1.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인해 국민갈등만 생기지 않았나요?
2. 대북화해협력정책 이후 북한은 변하고 있나요?
3. 우리도 어려운데 북한을 계속 도와주어야 하나요?
4.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5.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실현가능한가요?
6. 우리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것은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요?

1.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인해 국민갈등만 생기지 않았나요?



■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국민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남북관계가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 국민 내부에 냉전의식과 탈냉전의식이 혼재해 있고, 남북관계의 이중성 때문에 북한을 보는 시각과 북한의 변화를 재는 잣대가 서로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 하지만 이러한 갈등들은 과거 '대결과 반목의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한편,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우리 사회내 진보와 보수계층이 북한에 대한 현실적 시각을 갖게 됨으로써 이념적 논쟁이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 이는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정보가 늘어났고, 통일문제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개인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됨으로써 생겨난 결과입니다.

■ 앞으로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정서와 보편적 판단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협상과 관련하여 정보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정책추진의 투명성 제고에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2.

대북화해협력정책 이후 북한은 변하고 있나요?



■ 북한은 1990년 이후 에너지·식량·외화난, 이탈주민 증가 등 체제이완의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을 위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특히 경제분야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외화 획득 및 첨단 과학기술 도입을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허용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 또한 식량난 등으로 인해 공식배급체계 대신 농민시장 의존도가 심화됨으로써 주민들 사이에 개인적 소득과 수익이 보장되는 실리 추구적 경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중국·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서방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과 대외개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 국제경제, 금융, 무역, 회계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배우기 위해 2001년 한해동안 500여명의 북한 학자 및 경제관리들이 미국, 유럽 등지에 파견되어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 북한이 보여 온 변화 조짐은 북한체제의 오랜 경직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큰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변화해 갈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고, 단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변화가 축적되어 점차 북한의 정치·군사분야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3.

우리도 어려운데 북한을 계속 도와주어야 하나요?



-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북한에 너무 '퍼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우려입니다.

⇒ 1998년 이후 2001년까지 4년간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총 지원규모는 4,113억원(연평균 1,073억원)으로 연간 국민 1인당 부담액은 2,200원에 불과합니다.

$$\frac{\text{2000년 대북지원 총액(1.1억달러)}}{\text{국민총소득(4,552억달러)}} = 0.024\%$$

⇒ 또한 미국과 일본도 인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대북 지원을 해왔습니다.

* 현정부 출범이후 우리는 정부차원에서 1.9억불, 미국은 같은 기간동안 4.8억불, 일본은 2억불 상당을 지원했음 (일본은 국내가격 적용시 약 10배 정도 고가)



-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같은 민족을 돕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평화유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frac{2001\text{년 정부차원 대북지원}(913\text{억원})}{2001\text{년 국방예산}(15\text{조 } 3,884\text{억원})} = 0.59\%$$

⇒ 이러한 평화비용은 대외적 경제 신인도를 개선시켜 외자 유치에 기여하는 등 우리 경제회복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 또한 북한 경제회생을 돕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통일된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결핍과 발육 부진 상태를 방치할 경우 민족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우리 민족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을 잇는 평화사업으로 긴장완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43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금강산을 관광하였고, 그곳에서 다양한 남북간 행사를 개최하는 등 남북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 금강산 관광은 연평해전 및 지난해 미국의 대테러전쟁 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외국투자 유치 분위기 조성 등 우리의 경제회복에도 기여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사업주체의 자금사정 악화, 관광객 감소 및 북측의 관광활성화조치 지연 등으로 사업지속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동안 추진해 온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개설 등이 무위로 돌아가고, 남북관계 및 우리의 대외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북관계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과 긴장완화 등을 고려, 일단 관광사업을 지속 하면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였습니다.

⇒ 이산가족·학생 등의 관광경비 지원

⇒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조건 완화

⇒ 금강산 지역에 외국상품 판매소 설치 허용

■ 이러한 조치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금강산 관광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이며, 그 혜택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토대 위에서 관광특구 지정·육로관광 등 관광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5.

경의선과 동해안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실현가능한가요?



- 남북간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민족경제의 동맥을 잇고 남북간 직교역로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나아가 중국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을 통해 유럽까지 연결되면 한반도는 동북아 물류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 21세기 세계속의 한반도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현재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비무장지대 이남지역의 공사는 완료(2002.1.30)가 되어 도라선역까지 1일 2회씩 열차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 북측 구간은 남북장관급회담 등에서 수차례 경의선 연결을 합의하였으나 제반 정세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우리측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경제를 대륙과 연결하여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언젠가는 추진해야 할 사업이며 북측도 금번 특사 방북시 경의선 연결 자체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경의선 연결공사는 군사보장합의서 발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경우는 북측이 먼저 우리에게 제의한 것으로써 경의선과 함께 한반도의 동서 양 물류축을 형성하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 강릉~원산간을 연결하는 동해선 268.5km 구간 중 단절 구간은 강릉~온정리간 145km로서 남측이 강릉~분계선까지 127km, 북측이 분계선~온정리간 18km입니다.

⇒ 동해선 구간은 경의선과는 달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향후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의 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

우리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것은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요?



- 우리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를 지향하되, 중간단계로 남북이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과 민족사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남북연합」이라는 준비과정을 갖자는 것입니다.
-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 우리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것은
 - ↳ 남과 북이 통일방안이나 통일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한 것이 아니라, 통일에 앞서 과도적 단계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 이는 남과 북이 당장 통일을 실현하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화해협력과 평화공존하자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실현해 나갈 것에 합의한 것입니다.



우리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것은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요?

- 그동안 북한은 ‘연방제’ 안을 통해 당장 완성된 형태의 통일 국가 형성을 주장해 왔으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단계적 통일방안인 우리의 ‘연합제’안에 접근해 온 것입니다.
- 즉, 남과 북에 2체제 2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교권과 군사권을 갖는 연방(중앙)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비현실적임을 이해하고
 - ↳ 남과 북이 현재와 같이 외교권과 군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을 위해 협력기구를 구성하자는 남북연합 구상에 접근한 것입니다.
- 북한이 1990년부터 어려워진 대내외적 상황을 반영하여 연방제에서 지역정부의 권한 강화를 거론해온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는 연방제에 “낮은 단계”라는 과도적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우리의 연합제 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름: 김민준 (Kim Minjun) | 직위: 팀장 (Team Leader)

부서: 기획팀 (Planning Department) | 연락처: 010-1234-5678

회의 일시: 2024년 10월 27일 (2024. 10. 27.)

주제: Q4 마케팅 전략 회의 (Q4 Marketing Strategy Meeting)

참석자: 김민준, 이영희, 박성민, 최지현

의결 사항: 내년 1월 15일까지 Q4 전략안 제출 (Submit Q4 strategy plan by Jan 15, next year)